

## 인력난 '6<기존>+4<신규>' 업종별 맞춤형 지원 강화

- 관계부처 합동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

- 제조업(조선·뿌리),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등 「1차 대책(3.8.)」 6개 업종 현장 애로사항 추가 해소
-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등 4개 업종 추가 선정해 일자리매칭 지원, 인력양성, 근로조건 개선 등 책임부처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정부는 7월 12일(수)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제조업, 보건복지업 등 6개 업종\* 중심 '1차 대책'의 효과를 높이고, 인력난을 겪는 다른 업종으로 확산하기 위한 추가적 대책이다.

\* 산업부 제조업, 국토부 물류운송, 복지부 보건복지, 농식품부 음식점업, 농식품부 농업, 국토부 해외건설

2023년 5월 빈일자리수는 21.4만개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개 감소하였으며, 지난달(△0.4만개) 대비 감소폭 또한 확대되었다. 특히, 최근 인력 수요가 큰 조선업, 보건복지업, 농업 등 주요 구인난을 겪는 업종의 인력 수급 개선이 수치상으로도 확인되고 있어, 1차 대책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조선업은 6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7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8만명 증가(+8.5%)하였으며, 보건복지업은 전년 동월 대비 10.5만명(+5.4%) 증가한 204.1만명으로 나타났다. 농업의 경우 농촌인력증개센터를 통해 누적 160.2만명(연인원, +26%)의 인력을 매칭하는 등 구인난을 겪는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인력 공급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업종별 구인난 대응을 위해 그간 「범정부 일자리TF」를 중심으로 '1차 대책'의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신속취업지원TF」를 통해 조선업, 뿌리산업 등 구인에로기업에 내국인 1.7만명 규모의 채용 지원을 제공하여 인력수급상 미스매치 해소를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3년 외국인 비전문인력(E-9)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으로 확대하고, 최근까지 비전문인력(E-9) 6.8만명(62%)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을 완료하였으며, 숙련기능인력(E-7-4) 5천명을 조기 선발하는 등 외국인력 활용을 통한 현장 인력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장 기업들이 여전히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기존 6개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과제 발굴과 함께, 인력부족 해소 요구가 큰 4개 업종을 새로 선정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아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하였다.

## ① 기존 6개 업종 보완과제

**[조선업]** 원하청 실태조사, 기성금 개선 등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2.27.)」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및 이탈 방지를 위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신설('24년)을 추진한다.

**[뿌리산업]** 경력단절 여성 등 유희인력 활용 확산을 위하여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을 지원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뿌리산업 특화 일자리 매칭을 위한 「뿌리산업 도약센터」 신설·운영을 추진한다('24년~).

**[물류운송업]** 시외버스·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23.7.~12.)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을 확대하고, 「버스·터미널 지속가능기반 조성방안」을 마련('23.하)한다.

**[보건복지업]**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및 보수교육 의무화 안착을 적극 추진하고(시범사업 수행, 효과성 분석 등), 인력 확보를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방안」도 마련('23.10.)한다.

**[음식점업]**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와 연계한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신설('23.10.)하고, 로봇 도입·활용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제정을 추진('23.하)한다.

\* 로봇 도입을 통한 인력부족문제 해소, 외식 경쟁력 강화 지원근거 마련 등

[농업]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확대하여 농번기 인력부족 대응을 강화하고,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24.2.) 등 근로환경 지원을 강화한다.

\* 인력지원센터 설치, 실태조사, 중장기 인력 지원계획 수립 등

## ② 신규 4개 업종 맞춤형 지원방안

[건설업] 고층아파트 등 건설공사 시 간이화장실 설치방안 등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선제적으로 적용 후 민간 확산을 추진하고, 스마트 기술장비를 활용한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아울러 건설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한 직종별·수준별 맞춤형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고용제한 처분기준 개편 등을 통해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한다.

[해운업] 근로조건 및 실질임금 개선을 위해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확대하고,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하여 복지지원을 강화해나간다. 외항상선 승선기간 단축, 유급휴가일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도 추진('23.하) 한다. 또한 원활한 선원보충을 위한 해기인력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실습교육 확대를 위한 상선 및 어선 실습선을 신규 건조한다.

[수산업] 어선원 안전복지 개선을 위해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통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유통·도매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위판장 현대화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청년어업인 육성 목표달성(~'27년 4천명)을 위한 수산계고 승선실습을 개선하고,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도 지속적으로 조성한다.

[자원순환업] 인재유입 유도를 위해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폐기물 공공선별장에 대해 현대화·자동화 등 신규시설로 교체하여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하며, 영세 환경업체의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창업·벤처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과 협약대학 연계를 통해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및 분류 업무 등에 대해 단순외국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한다.

### ③ 빈일자리 해소 인프라 확충

[근로조건 개선] 중소기업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청년채용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및 취업 청년의 초기 직장적응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일자리 매칭지원 강화]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지원금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가칭)고용24」를 시범 오픈('23.11.)하고, 기업 특성에 기반하여 「인력수급 진단-컨설팅-맞춤형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기업도약보장 패키지」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외국인력 공급 확대] '23년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3만명을 추가로 확대하고, 비자 취득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 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인력부족 업·직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단순 외국인력(E-9) 신규 허용업종 검토도 추진한다.

\* 소득요건 하향(현재 年 2,600만원) 등

이정식 장관은 “윤석열 정부 핵심 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의 최종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며, “그런 의미에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은 노동개혁의 일환이고, 동시에 노동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빈일자리의 근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체계적 인력양성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등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상생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중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며,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하고 지지하는 노동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별첨: 「제2차 빈일자리 해소 방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준호 (044-202-7962)
	노동시장수급대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호준 (044-202-7969)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책임자	과 장	김시동 (044-215-8530)
	인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요균 (044-215-8531)
			사무관	김범석 (044-215-8533)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김혜진 (044-201-3252)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	담당자	서기관	강연근 (044-201-3261)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책임자	과 장	이민석 (044-200-5740)
	선원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안준영 (044-200-5745)
	수산정책실	책임자	과 장	정준호 (044-200-5460)
	소득복지과	담당자	사무관	김혜은 (044-200-5463)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책임자	과 장	서영태 (044-201-6678)
	녹색전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준규 (044-201-6688)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양정화 (044-203-4220)
	산업일자리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임기홍 (044-203-4225)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책임자	과 장	송명준 (044-202-3270)
	사회서비스일자리과	담당자	주무관	윤성희 (044-202-3275)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덕민 (044-201-1711)
	농업경영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혜정 (044-201-1724)
<중소벤처 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동원 (044-204-7440)
	인력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박혜영 (044-204-744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책임자	과 장	김태형 (02-2110-4055)
	체류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황민하 (02-2110-4062)

## 빈일자리 · 구인난 해소 → 고용모멘텀 유지

### 신규 인력부족 심각 '4개업종' 별 맞춤형 지원

 <b>건설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의시설 설치기준(샤워·탈의 등) 마련, 적용·확산</li> <li>▶ 건설기능인등급제 기반 교육 확대, 인력매칭 지원</li> </ul>	국토부
 <b>해운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선기간·유급휴가일 개선, 외항·원양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li> <li>▶ 우수 외국인 장학생 유치, 외국인력 인권보장 강화</li> </ul>	해수부
 <b>수산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선원보험' 의무화, 노후 위판장 현대화 지원</li> <li>▶ 외국인력 쿼터 확대 검토, 복지회관 조성</li> </ul>	해수부
 <b>자원순환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 공공선별장 현대화·자동화 지원</li> <li>▶ 산업계 수요 맞춤형 재직자 교육 강화, 고급인력 양성</li> </ul>	환경부

### 보완 현장요구 기반 '기존 6개업종' 추가 과제

<b>조선업</b> 산업부	<b>부리산업</b> 산업부	<b>물류·운송업</b>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구체화 등 격차해소 지원</li> <li>▶ 외국인력 신속도입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친화형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li> <li>▶ '부리명장센터' 운영, '도약센터'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고용업종' 지정기간 연장·지원</li> <li>▶ '버스·터미널 지속가능 기반조성 방안' 마련</li> </ul>
<b>보건·복지업</b> 복지부	<b>음식점업</b> 농식품부	<b>농업</b>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추진</li> <li>▶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 방안'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연계 매칭 지원</li> <li>▶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제정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류형 영농작업반 확대</li> <li>▶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특별법' 시행</li> </ul>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

+

수요자 관점  
일자리 매칭  
강화

+

외국인력  
도입확대 및  
관리시스템  
확충

- 오늘 발표하는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제조업 등 6개 업종\* 중심의  
‘1차 대책’의 효과를 더욱 높이고,
  - 이를 인력난을 겪는 다른 업종으로 확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추가 대책입니다.
    - \* 산업부제조업, 국토부물류운송, 복지부보건복지, 농식품부음식점업, 농식품부농업, 국토부해외건설
  
- ‘23년 5월 빈일자리 수는 21.4만개로,  
전년동월대비 1.1만개 감소하였으며,  
지난달(△0.4만개) 대비 감소폭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 특히, 최근 인력수요가 큰 조선업·보건복지업 등에서  
인력수급 상황이 일부 개선되고 있음이 수치상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 \* (선박및보트건조업) ‘23.6월 피보험자수 10.7만명, 전년동월대비 0.8만명 증가(+8.5%)  
(보건복지업) ‘23.6월 피보험자수 204.1만명, 전년동월대비 10.5만명 증가(+5.4%)
  
- 이는 관계부처가 「범정부 일자리TF」를 중심으로,  
‘1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 그간 정부는 「신속취업지원TF」를 통해 조선업, 뿌리산업 등  
구인애로기업에 1.7만명 규모의 내국인 채용을 지원하는 한편,
  - 외국인력의 공급 확대\*와 신속한 도입\*\* 등  
현장의 인력수요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 \* ‘23년 비전문인력(E-9) 도입 규모 11만명(‘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최대)
    - \*\* 비전문인력(E-9) 11만명 중 6.8만명(62%) 고용허가서 발급 완료,  
숙련기능인력(E-7-4) 5천명 조기 선발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여전히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이에, 이번 '2차 대책'에서는 기존 6개 업종에 대해 그간 현장에서 살펴본 기업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추가 보완과제를 발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인력부족 해소 요구가 큰 국내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을 신규로 선정해 책임부처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업종별 산업 특성과 인력수급 상황을 토대로, 열악한 근로조건, 인력 미스매치, 외국인력 공급 부족 등 구인난 발생의 주요 원인을 함께 고려하여 대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의 최종 목적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표하는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역시 '노동개혁'의 일환이며,
  - 동시에, '노동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빈일자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 따라서 정부는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한편,
  - 산업구조 전환 등에 대응한 체계적인 인력양성, 기업과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국내 노동시장과의 조화로운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
  - 현장의 빈일자리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 한편, 빠른 시일 내에 상생임금위 논의를 거쳐 "이중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하고 지지하는 노동개혁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